

# 소부장 기반 약한 서남권... 생태계 구축이 팹 성패 가른다

## AI 호남 반도체 시대

### ③ 협력사 동반 이전 속제

삼성·SK, 광주 군공항 팹 부지 확정 반도체 관련 기업 비중 2.6% 그쳐 협력사 적기 확보가 정상가동 좌우 현장 대응 거점 없인 수율 차질 우려 앰코 1조 투자로 후공정 기반 확대



강훈식 비서실장이 6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팹 부지가 광주 군공항 일대로 확정되면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협력사의 동반 이전이 남은 과제로 떠올랐다. 서남권의 반도체 기업 비중은 2.6%에 불과해 협력사를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팹을 정상 가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팹이 모두 이 부지에 들어선다. 250만평 규모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평탄화가 끝나 조성 기간을 줄일 수 있으며 도심과 고속철도에 인접한 점이 선정이

유로 제시됐다.

입지는 정해졌지만 팹을 떠날 협력사 기반은 다른 문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남권(광주·전남·전북)의 반도체 관련 기업 비중은 2.6%다. 수도권이 69.4%로 가장 많고 충청권 18%, 대경권(대구·경북) 6.1%, 동남권 3.4% 순이다.

반도체는 공정마다 다른 장비와 소재를 수백 개 협력사로부터 적기에 공급받아야 하는 장치 산업이다. 팹은 24시간 가동되고 장비 이상이 수율에 직결되기 때문에 협력사의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필수적이다. 소부장 기업들이 삼성전자 평

택캠퍼스와 SK하이닉스 이천·청주 사업장 인근에 생산거점과 서비스센터를 두고 있는 이유다.

문제는 협력사를 호남으로 데려올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협력사는 계열사와 달리 독립기업이어서 앰코기업(투자를 이끄는 핵심 대기업)이 이전을 강제할 수 없다. 정부의 권역별 계획에서도 소부장은 호남 몫이 아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첨단 패키징 클러스터는 81조원 규모로 충청권에 배치됐고 소부장 공급망 허브는 동남·대경권에 돌아갔다. 호남은 메모리 전공정 팹에 특화됐다. 결국 호남

팹 주변의 협력사 집적은 개별 기업의 판단에 맡겨진 상태다.

이에 따라 앰코기업이 직접 동반 이전 여건 조성에 나섰다. SK하이닉스는 투자 발표 직후 “앰코 기업에게 소부장 협력사 외의 적기 협업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서남권 클러스터가 협력사에도 매력적인 사업 기반이 되도록 동반 입주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보고회에 반도체 소재 기업 솔브레인과 기반 기업 이수페타시스 등 협력사가 함께 참석한 것도 동반 이전 논의가 시작됐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소부장 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공정 이상에 즉각 대응하려면 지사 형태의 거점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평택과 이천 등 기존 팹 주변에 협력사가 모여든 것도 같은 이유였다. 반면 이전 규모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주요 소부장 기업들이 이미 용인·화성 등 수도권에 연구개발(R&D) 시설과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어 호남에는 장비 설치와 사후관리(A/S) 인력 일부만 둘 수 있다는 것이다.

장비 제작에 두 달가량 걸리는데 비해 완성된 장비를 광주로 옮겨 설치하는 작업은 하루면 가능해 생산기까지도 옮길

필요는 없다는 시각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부지 선정부터 조성까지 9년 넘게 걸린 점에 비춰 호남에서 협력사 생태계가 자리 잡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후공정에서는 투자가 먼저 시작됐다. 세계 2위 반도체 패키징 업체 앰코테크놀로지는 광주 사업장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해 첨단 패키징 라인을 증설한다. 오는 10월 5000억원 규모의 1단계 공사에 착공하고 2035년까지 최대 1000명을 새로 고용할 계획이다.

광주 공장은 앰코 전체 생산물량의 절반을 담당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기존의 두 배인 투자액 최대 20%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앰코와 투자 유치 협약을 맺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력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는 D램을 여러 층 쌓는 구조여서 패키징 역량이 품질을 좌우한다. 팹이 광주 군공항 부지로 확정되면서 앰코 광주 공장과의 집적 효과도 커질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소부장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책도 내놨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 중복상장 ‘원칙금지’... 물적분할 땐 3%를 주주동의 의무화

금융위·거래소, 중복상장 기준 마련 이사회, 영향평가·보호방안 선행 반대 결의 땐 거래소 심사 못 해 위반 시 최대 10억 제재·하루 정지

금융당국이 일반주주 권익을 훼손하는 비대칭적 중복상장을 막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상장사가 자회사를 증시에 올리려면 모회사 이사회가 먼저 주주영향을 평가하고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은 일반주주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일반적인 중복상장에 강화된 거래소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 허용’을 위한 거래소 규정 개정안과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7일부터 의

견수럼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예고기간은 오는 14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새 제도의 핵심은 중복상장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 체계를 도입한 데 있다.

적용 대상은 상장 모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비상장 자회사다. 외부감사법상 종속회사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가운데 모회사가 자본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그 손자·증손자 회사 등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기업도 포함된다.

앞으로 모회사 이사회는 자회사 상장 추진에 앞서 ▲주주영향평가 ▲주주보호방안 마련 ▲주주소통 또는 주주동의 여부 확인 ▲이사회 찬반 결의 및 자회사 동지 ▲공시 등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과정은 독립적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자회사를 해외 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거래소보다 모회사 이사회가 먼저 중복상장의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설계했다. 자회사 상장이 모회사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잘 아는 주체가 이사회라는 판단에서다. 고영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기업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이사회”라며 “모회사 이사회가 자회사 상장에 찬성하지 않으면 심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사회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억원의 제재금과 1일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불성실공시 제재도 적용된다.

거래소는 기존 일반상장심사와 별도로 영업 독립성, 경영 독립성, 투자자 보호 등을

중심으로 중복상장 특례심사를 실시한다.

특히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주주동의를 원칙적으로 권고하고,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 상장은 주주동의를 의무화했다.

주주동의 기준은 상법상 감사위원 선임 방식과 같은 ‘3%룰’을 적용한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3%까지만 인정하며, 참석 주주의 과반과 전체 의결권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물적분할이 아닌 일반 자회사는 주주동의를 받으면 주주보호 노력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동의를 받지 못하면 거래소가 개별 사인을 엄격하게 심사한다.

금융위는 일각에서 제기된 일반주주 과반동의(MoM) 방식 대신 3%룰을 채택한 배경으로 주주평등원칙과 제도 운용의 현실성을 들었다. 고 과장은 “MoM은 특정 주주에게 혜택을 주는 것과 같아 법무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도 권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3%룰이 현장에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상법상 감사위원 선임과 달리 전자투표를 실시하더라도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 요건은 유지한다. 금융위는 전자주주총회 플랫폼 구축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일반주주의 참여 여건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첨단산업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예외를 인정하지도 않는다.

/허정윤 기자 zelkova@ metro



# 구윤철 “서비스산업 경쟁력 높여 경제 대도약 뒷받침해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서비스산업기본법 제정 강조 AI 커머스·UAM 제도 기반 마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른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도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국내 서비스업 연구개발(R&D)·세제·금융 부문 등에 대한 정책 지원을 위한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

구 부총리는 6일 서울 중구 모처에서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전담반)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판을 새로 짜야 한다”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경제 대도약을 위해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중심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다음 과제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AI의 단순 상품추천을 넘어, AI가 스스로 상품 비교·주문·결제 등을 대행하는 ‘AI 에이전틱 커머스’ 시장 선점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에 AI 에이전트의 쇼핑 전 과정을 실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추진 중이다. 또 자동차·도심형 공교통(UAM) 등이 AI 자율주행과 결합하는 새 이동서비스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신산업 기반 조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전기차배터리 구독서비스,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교통 등 생활 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신산업의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과감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자율주행 배달로봇, 부동산·저작권 조각투자, 콘텐츠와 유통 결합, 가전 구독서비스 등을 예로 들었다. 신산업일수록 여러 부처의 규제가 얽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 미용·숙박 등 서비스업이 규제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고 금융·R&D·수출 지원도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돼 있는 탓에, 서비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산업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서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 독일 “가능성 충분”... NATO 변수 관건

>> 1면 ‘캐나다 잠수함...’서 계속

올리버 부르크하르트 TKMS 최고경영자(CEO)도 “우리가 계약을 파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독일이 내세우는 핵심 경쟁력은 NATO 동맹국 간 상호운용성이다. 캐나다가 NATO 회원국인 만큼 독일 잠수함을 도입하면 유럽 안보 협력과 해군 전력 운용 측면에서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TKMS의 잠수함 건조경험과 유럽 방산 공급망, NATO 체계 내 군수지원 연계 가능성도 강점으로 거론된다.

캐나다가 유럽 안보 협력 틀에 더 깊이 들어간 점도 독일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캐나다는 유럽연합(EU)의 공동 군사 조달 및 방산 투자 프로그램인

SAFE 참여를 통해 유럽 방산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독일 한 나라와의 협력에 그치지 않고 EU와 NATO 동맹 체계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한국산 잠수함 선택에는 정치·외교적 부담이 따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선 캐나다가 투자 및 산업협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분할 발주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의 가격·납기 경쟁력과 산업협력안을 활용하면서 독일을 통한 NATO 기반 운용 체계까지 함께 확보하는 방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캐나다가 한국의 산업협력 제안과 잠수함 경쟁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NATO 회원국인 독일과 유럽 방산 협력 구도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